

#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905
----------	------

제출연월일 : 2024. 6. .

제출자 : 하남시장

## 1. 제안이유

- 과태료 부과 절차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폐지조례안은 불필요한 중복 조항이며,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례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  
나. 이 조례 중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이관

## 3. 폐지조례안: 덧붙임

## 4.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 5.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6. 예산수반사항: 덧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7. 입법예고결과**

가. 예고 기간: 2024. 3. 13.~2024. 4. 3. [21일간]

나. 의견 내용: 의견없음

##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의견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의견없음

## **9. 참고사항: 덧붙임**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검토결과

## **10. 관련부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자원순환과**

#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자원순환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자원순환과장 최 현 숙
	팀장 직위·성명	자원행정팀장 전 수 영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진 우 근 (790-5644)

##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의견진술의 기회 제공)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 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 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입통지서를 발부 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입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 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가산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14.3.12> <개정 2019.7.3.>

② 과태료부과처분 전에 조치 완료한 경우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 7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하남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위법행위 신고)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 수집 장소, 설비 또는 허가나 승인을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매립 또는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과태료 부과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3.12>

② 포상금은 행위 유형별로 신고포상금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도서상품권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반행위 적발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방문·우편·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개정 2018.9.3.>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과 위치
3. 신고 장소 및 적발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④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 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신고자 및 신고내용 등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처리결과의 통지)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때 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포상금 지급대상의 경우에는 지급방법 및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로서 시장이 과

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이의제기한 경우 또한 같다)에 지급하되,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며, 그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동일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분기별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한 포상금
2.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3. 신고인이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 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임이 확인된 경우
4.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13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14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외에는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9.7.3.>

## 관계법령 발췌서

1

### 「폐기물 관리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

○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 없음

## **4. 작성자: 친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 의견제시 사례<sup>※</sup> > 법제업무정보 > 자치입법 의견제시 > 의견제시 사례

####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관련)

안건번호 의견14-0027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신일자 2014. 2. 18.

##### 1.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서 폐기물 무단투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정하고, 부과·징수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근거로 조례 또는 조례 시행규칙에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 2. 의견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서 과태료부과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부과·징수권한이 있을 뿐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은 없으므로 조례 또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과태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3.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나 조례 시행규칙에서 과태료 관련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일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및 별표 8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조례시행 규칙에서 과태료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질의에 관하여 살펴볼 때,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고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구의 조례 또는 조례 시행규칙에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